IBK경제연구소 경제금융팀 ☎02-729-6252

IBK 경제나침반

2018.7

참!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| IBK경제연구소

목차

Ⅰ. 경제 동향

Ⅱ. 경제 이슈

1) IMF, ’18년 세계경제 성장률 3.9%로 기존(4월) 전망치 유지

2)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소상공인 대책

3) 2018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

I B K 경 제 연 구 소

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

본 자료는 IBK경제연구소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식 자료이며,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1 경제 동향

□ [미국] 고용·소비·생산 증가 등 경기확장세 지속

○ 실업률*이 상승했으나, **6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수는 21.3만명**(상반기 평균 21.5만명)

* 실업률 상승은 **고용시장 호조로 구직에 나선 노동인구가 큰 폭 증가**함에 기인(백악관 경제자문회의)

○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(12.9%)부문 호조로 생산(3.8%)이 증가했고, 소비(6.6%)는 주유소 판매(21.6%), 전자상거래 판매(10.2%) 증가 등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 확대

□ [중국] 2/4분기 경제성장률은 6.7%로 전기대비 0.1%p 둔화, 상반기 6.8% 기록

○ 무역분쟁 재점화로 생산, 투자 등은 소폭 둔화, 소비는 견조한 흐름

○ **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**하고 **'18년 정부목표치(6.5%) 수준 유지**

□ [유로존] 소비·수출 증가세 둔화되며 경기회복세 부진

○ 수출(0.5%)은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**미국 등 역외 수출(△0.9%) 감소**로 둔화

※ 국가별(전년동기대비, %) : 중국 2.4, 미국 △2.3, 한국 △11.5, 일본 △1.8

○ 난민정책 갈등, 伊 포퓰리즘,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정치적 이슈 부각으로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

※ 금융지표('18.1.2일 → 7.19일) : 유로화환율 1.20 → 1.16, △3.3% | Eurostoxx50 3,139.7 → 3,030.4, △3.5%

□ [국내] 생산·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수출은 둔화

○ **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고액(2,972억달러) 기록**, 증가세('17.상 15.7%→'18.상 6.5%)는 둔화

- 반도체, 석유제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'16년 선박 수주 감소, '17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 등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

※ 품목별(전년동기대비, %) : 반도체 37.3, 석유제품 71.0, 승용차 △9.3, 선박 △83.2

○ **2/4분기 경제성장률**은 **투자는 감소**했지만, **소비와 수출이 증가세**를 유지해 **2.9%** 기록

※ 성장기여도(%p) : 건설투자 △0.1, 설비투자 △0.4, 소비 2.1, 수출 2.2, 수입 0.9

○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'18년 경제성장률을 2.9%로 0.1%p 하향 조정

-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,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 및 소비 회복세는 다소 둔화 전망

<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>

(전년동기대비, %)

경제성장률	'17.Q1	Q2	Q3	Q4	'18.Q1	Q2
미 국	**2.0**	2.2	2.3	2.6	**2.8**	-
중 국	**6.9**	6.9	6.8	6.8	**6.8**	6.7
일 본	1.4	1.5	1.9	1.8	0.9	-
유 로 존	2.6	1.9	2.6	2.5	2.2	-
국 내	**2.9**	2.8	3.8	2.8	**2.8**	2.9

구 분		2017년		2018년				
		5월	6월	2월	3월	4월	5월	6월
미 국	산업생산	2.1	**1.8**	3.6	3.6	3.7	3.2	**3.8**
	소매판매	4.0	**3.3**	4.5	5.1	4.8	6.5	**6.6**
	소비자물가	1.9	**1.6**	2.3	2.4	2.4	2.7	**2.8**
	비농업신규취업자(만명)	15.5	23.9	32.4	15.5	17.5	24.4	21.3
	실업률	4.3	4.3	4.1	4.1	3.9	3.8	4.0
중 국	산업생산	6.5	7.6	7.2	6.0	7.0	6.8	6.0
	소매판매	10.7	11.0	9.7	10.1	9.4	8.5	9.4
	고정투자	8.6	8.6	7.9	7.5	7.0	6.1	6.0
	수출	8.7	**11.3**	44.5	△2.7	12.9	12.6	**11.3**
일 본	산업생산	5.7	**6.0**	2.9	1.7	2.5	**2.6**	-
	소매판매	3.2	2.1	1.5	1.7	1.5	0.6	-
	수출	7.5	**14.9**	12.2	1.8	2.1	**8.1**	6.7
유 로 존	산업생산	3.6	2.2	2.6	3.2	1.7	2.4	-
	소매판매	2.5	3.1	1.8	1.7	1.6	1.4	-
	수출	14.5	**4.8**	4.3	0.4	10.7	**0.5**	-
	실업률	9.2	9.0	8.6	8.5	8.4	8.4	-
국 내	제조업생산	1.5	0.8	△7.8	△4.3	0.6	0.8	-
	소매판매(불변)	0.4	**0.8**	6.5	7.0	5.5	**4.6**	-
	설비투자	20.1	**18.7**	9.5	0.1	1.3	**△4.1**	-
	수출	13.1	13.4	3.3	6.0	△1.5	13.2	△0.2
	실업률(계절조정)	3.6	3.8	3.6	4.0	3.8	4.0	3.7

2 경제 이슈

□ [이슈 1] IMF, '18년 세계경제 성장률 3.9%로 기존(4월) 전망치 유지

○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나, **단기 하방 리스크* 확대시 투자와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것으로 전망 * **무역분쟁, 미 금리인상, 정치적 불확실성 등**

○ **(선진국)** 유로존 및 일본 성장세 둔화로, **성장 전망 다소 약화**

- **미국**은 무역분쟁과 대형 감세효과가 상쇄되어 **기존 성장 전망치(2.9%) 유지**

※ '18년 경제성장률 전망('18.4월 → 7월, %) : 선진국 2.5 → 2.4, 유로존 2.4 → 2.2, 일본 1.7 → 1.2

○ **(신흥국) 기존 전망 유지**한 가운데, 국가별 성장 전망은 상이

-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전과 동일하나, **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 전망치가 하향조정**

※ '18년 경제성장률 전망('18.4월 → 7월, %) : 신흥국 4.9 → 4.9, 중국 6.6 → 6.6, 브라질 2.3 → 1.8

□ [이슈 2]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소상공인 대책

○ (현황) 최저임금위원회는 **'19년 최저임금을 10.9% 인상한 8,350원**으로 결정

※ 최저임금(원) : 5,210('14) → 5,580('15) → 6,030('16) → 6,470('17) → 7,530('18) → 8,350('19)

- **임금인상 대상자*의 98%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**, 대기업은 2%에 불과(중기부)

*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.2%(149.6만명), 숙박·음식업 종사자의 51.7%(61.2만명) 등 289.8만명

○ (현장의견) **소상공인**은 '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규모(종업원수, 매출액)에 상관없이 **74.7%가 '감내하기 어렵다'라고 응답**해 경영여건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식(중기중앙회)

○ (정부의 주요대책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**보완대책을 8월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**

- 최저임금 업종별·규모별 차등화 검토, 장기연체 영세자영업자 빚 탕감(4,800억원), 소상공인 페이 구축,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(10년), 해내리 대출 확대,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

□ [이슈 3] 2018년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(기획재정부, 7/18)

○ (방향) 소득·고용·삶의 질에 걸쳐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, 공정경제 등을 지속·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

구 분	주 요 내 용		
소득주도 및 혁신성장	• 근로장려세제(EITC)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• 핵심규제 선정(8월), 규제혁신안 마련(하반기) • 메가 투자 프로젝트 선정 후 예산·세제·금융 투자	▶	포용적 성장* 달성
공정경제	• 다중대표소송제 도입, 전자투표제 의무화 •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·확산		
경제활력	• 기금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4조원 규모 재정 보강		

* 2009년 세계은행이 정립한 개념으로서 1차 분배는 시장에 맡기고 과세·복지 정책 등을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, 정부는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, 공정경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